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충청남도
의회 소식**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제293·294회 임시회

75

CONTENTS



개회사	02
본회의	03
하이슈	04
의원논단	09
도정 · 교육행정 질문	13
5분 발언	19
현장의정	30
상임위원회	31
특별위원회	37
의원주장	38
주요안건 처리현황	40
연구 및 토론	4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9
포토의정	52
2017 의회운영계획	58
느낌충남	59

충청남도의회소식지 제75호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전화 | 041)635-5102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 · 제작 | 효성종합인쇄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팩스 | 041)635-500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으며,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 모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국론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혼돈과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이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들의 중심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모든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하게 되며,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도내 주요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주변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
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7.

충청남도의회 의장 **문석우**



제294회 임시회 폐회... 18개 안건 처리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 7건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되짚고 해결책 제시
각 상임위 현장 방문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등



충남도의회는 4월 6일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7건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6기 현안을 되짚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총 4명으로, 각종 위원회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민관 협치 활성화 문제 등을 직언했다. 또 교육행정의 비위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언했고,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도민의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심의에서도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과 '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또 '6차 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민간 위탁 동의안' 등 8개의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상임위는 보령댐과 국제여객선, 계룡소방서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내포문화권발전특위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신도시를 찾아 내포신도시를 물론 유교문화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우 의장은 "도정의 현안인 조류인플루엔자, 산불, 가뭄, 내년도 국비활동 등 소홀함이 없도록 매진해 달라"며 "그동안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후원회제도 도입 등을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t
Issue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낙운 의원 대표 발의 “정부 쌀 정책 실패 탓” 목청… 특단 소득보전대책 촉구
 농민들 포대당 860원 차액 돌려줘야… 충남만 28억 87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4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 5000원(1등급 40kg 포대 기준)에 책정됐으나,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 4140원으로 확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

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 8000원씩 모두 197억여 원, 충남만 28억 87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정부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쌀 관련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쌀 수급 통계를 하고 있다”며 “25년 전 쌀값으로 하락시킨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하지 말고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Hot
Issue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 · 폐업 시 재정 지원

이종화 의원,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신도시 정착 발전 등 쾌적한 환경 기대



충남도청은 이전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농가들이 이전 및 폐업을 신청하면 재정을 뒷받침한다. 충청남도의회는 4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축사의 이전 또는 폐업을 추진할 경우 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당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신도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쾌적한 환경 및 수준 높은 정주 여건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신도시 주변 5km 내에는 450여 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 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라며 “축사가 인접해 있다 보니 가축 분뇨 등에서 악취가 신도시를 뒤덮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 농가 역시 청소와 분뇨수거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Hot
Issue

충남도의회 의장단, 충남 하늘길 열기 위해 동분서주

의장단 서산 軍 비행장 찾아 민항 유치 관련 추진 상황 점검
 “미래 사회 발전 위해서는 육·해·공 사통팔달 접근성 높여야”… 민항 유치 힘 보태



충남도의회가 중국과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조치연 부의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김종필 의원 등은 3월 23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찾아 민항 유치 관련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조덕구 단장과 환담을 나눈 뒤 제20전투비행단 소개 및 서산 민항유치 추진 상황을 듣고, 이와 관련한 간담회와 시설을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도의회 의장단이 앞장서 비행단 시설을 찾은 이유는 미래사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육·해·공 사통팔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항공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광역자치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만 공항이 없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힘을 보태

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의장은 “중국과의 최단 거리인 충남 서해안의 지리적 요인을 십분 활용하려면 현재 해상물류와는 별도로 항공 물류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와 충남 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서북구 산업벨트, 환황해권 시대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민항 유치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신재원 부의장은 “서북부 지역은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다”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 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민항 개발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치연 부의장은 “산업·관광자원을 활용할 경우 2020년 서산비행장의 항공 수요는 국내선 47만 명, 국제선 17만 명 등 6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루빨리 민항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
Issue

윤석우 충청도의회 의장, 계룡산 생태탐방 체험시설 국비 확보 총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만나 국비 지원 요청

대부분 생태탐방연수원 영·호남권 치우쳐 있어… 충청권 역차별 우려 등 필요성 강조



충청도의회가 계룡산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미래 세대 환경교육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윤석우 충청도의회 의장은 3월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박보환 이사장을 만나 계룡산 생태탐방 체험시설 유치 및 국비 15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계룡산 생태탐방체험시설은 전통사찰인 갑사의 역사문화와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험하는 동시에 체류형 생태탐방체험 시설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국비가 확보될 경우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갑사 초입부) 일원에 생태관광 기반 시설(부지면적 2만842㎡)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 의장은 이날 대부분 생태탐방 연수원이 영·호남권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강조, 국립

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 건립을 제안했다.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 연수원은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서울) 등 총 7곳에 분포해 있다. 구체적으로 ▲지리산 등 호남권 3곳 ▲소백산 등 영남권 2곳 ▲북한산과 설악산 등 서울·강원권 각각 1곳에 운영·건립 중이다. 하지만 충청권에는 단 한 곳의 생태탐방연수원이 없어 자칫 국토균형 발전에 소외받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장의 주장이다. 이어 “계룡산 생태탐방체험시설은 생태·문화·역사 자원 교감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에코힐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한 관광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Hot
Issue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소년체전 예산 확보 전방위 대응 나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만나 소년체전 예산 증액 요청
 경기 용 · 기구 비용 6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1억 원 이상 추가 지원 필요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오는 5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윤 의장은 3월 21일 서울 대한체육회에서 이기흥 회장을 만나 대한체육회에서 개최지에 지원하는 대회운영비 증액을 요청했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종목별 전용체육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반 체육관 사용비중이 높아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용·기구 임차비용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제 경기 용·기구 비용이 6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서 “충남도 1회 추경은 5월 이후인 만큼 추가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체육회의 지원 예상규모는 1억 380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 1억 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46회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아산시 등 15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원논단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기를 '홀로서기'라 칭한다. 사람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즈음에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통해 자립심을 키우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정체성과 방향을 정하곤 한다.

물 한 모금이 아쉬운 사막이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남극에서 생활하는 동물들 역시 스스로 사냥하는 기술을 익히면 부모의 곁을 떠나곤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라는 품안에 갇혀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종속된 모습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80%가 넘는 권력과 자본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사무 이양 역시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사무 배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뤘나갈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운영체제이다.

민주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내려 보내야 한다.

이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국민 역시 87년 6공화국 체제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는 국민적 요구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선결로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다.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 권력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도 권한의 불균형으로 나타나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특위 간사 의원들 역시 지방분권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특정 지방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지방분권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홀로서기를 통해 행복해질 때가 됐다.



의원논단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 꽃

얼마 전 내포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한 식당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선 도의원인 나로서도 적잖이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의정소식지를 접하는 도민여러분께 지방의회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은 공무원 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임용되어 도와 시·군에서 각종 공적인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정책 시행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의 확충, 주민생활경제 안정 등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곧 210만 충남도민들께서 각자 스스로는 해결하기 힘든 공공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 공복(公僕)이라 일컫는 공직자들을 채용하여 대행하게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업무가 잘 수행하는지 살피고, 또 공직자들에게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려면 효율적인 방법과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한다. 210만 명 도민 각자가 한 마디씩만 한다 하여도 공직자들은 210만 마디의 말씀을 듣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적일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각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나 대신 이러한 일들을 살피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초의원들은 각 시·군의회에서, 광역의원들은 시·도의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원들은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열어 공개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각 사안들을 결정하여 시·도와 시·군·구, 시·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등이 일을 잘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대의민주주의인 것이다. 도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첫째,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을 대신하여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 계획표인 예산을 확정하며,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충청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다.

셋째, 도청과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감독한다.

넷째, 도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듣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현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40명의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주민 그 자체이다. 지방의원은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개진하며 활동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지방의회는 그 줄기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불리고 있다. 올 한 해 지방 자치의 꽃이 진정으로 예쁘게 피어나기를 기원해본다.



의원논단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이 국가와 정치 상황을 걱정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신다. 하지만 지금의 복잡한 갈등과 부조리의 상황들은 대통령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뀔다고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30년 전인 1987년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 체계이다.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크기는 작지만 잘 살아가는 선진국의 대표라 일컫는 스위스는 그 성공비결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를 포함한 연방제도’에 있다고 얘기한다. 지방끼리 경쟁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중앙집권형 국가였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헌법에 규정하고, 자율적인 행정권과 행정입법권 등을 명문화하는 전면적인 지방분권화 개헌을 실시하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잠시 내각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바뀌게 되어 국가의 성장을 집중된 권력 체계하에서 주도하게 된다. 여기에 남다른 성실함과 근면을 지닌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새 물결 속에서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국가가 모두 관할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역설적이게도 어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로 인한 기능 마비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의 하급기관 수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거듭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가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일부 실패사례는 경고 기능으로 작동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양극화, 청년실업, 외교, 국방, 경제상황 등 당면한 국가과제들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부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더 이상 모든 문제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을 때만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지속될 것이다.



의원논단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장

서산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필요하다

봄이 왔습니다. 반가워야할 봄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뿌연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황사려니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맑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그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고, 누구는 화력발전소가 주범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석유화학 공장, 제철소가 많아서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7기가 건설되고 있고 2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발표에 의하면 “대산지역은 세계에서 이산화질소 오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한 2015년 굴뚝자동측정결과 충남의 경우 전국 배출량 40만 톤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가 충남 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NASA는 충남 서부 지역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의 대기오염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남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라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충남도의 노력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입니다. 대기오염 주범의 하나로 알려진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충남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제주도, 서울, 대전, 울산, 광주 등 6개소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발목이 아픈 데 손목을 진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충남에도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탄소 성분, 이온성분, 중금속 등 250여종의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대기오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최적지는 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의 바로 서쪽에 태안화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바로 동쪽에 당진화력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머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산시 경계로부터 5Km 조금 더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서산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있는 도시입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충남에, 그것도 서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도정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전낙운 의원

Q1 충남에 크고 작은 축제가 100여 개가 넘는데 유독 백제문화제에 한해서 연평균 20여억 원 이상의 순도비를 편성하고 있음. 백제문화제가 충남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매년 이만큼씩 쏟아 부어야 되는지 궁금함. 논산에서 격년제로 황산벌전투 재현행사를 네 번 해왔음. 대한민국 마사회에서 마필산업발전기금과 시비를 더해 5억여 원으로 행사를 실시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격년마다 당일 행사로 하고 있음. 올해 공주와 부여에 집행할 백제 관련 예산이 18억 원이 되는데 전형적인 문화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A1 백제문화제는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제이고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해왔음. 올해 백제문화제부터는 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예정임. 논산에도 황산벌 전투재현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Q2 논산 황산벌 인근에는 도지정문화재인 황산성이 있음. 현재 축대로 쌓았던 돌들이 무너지고 숲이 우거져 있음. 황산성 발굴조사 내지는 발굴조사 전에 하는 연구용역이라도 시행하여 황산벌-황산성을 연계시켜서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함.

A2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황산성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Q3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강경 근대역 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올해까지 117억 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205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이 중 도비 2억 5,000만 원을 제하고 311억 원이 지특·시비·민자로 되어 있음. 강경 주민들에 의하면 도로를 좀 정비하고 좌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고쳤는데 보상받아서 대부분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떠나서 오히려 주민 숫자만 줄었다고 함. 근대역사문화라는 것은 사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건축물, 문화적 잔재 이런 것들을 근대역사문화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길이나 발길을 사로잡을만한 어떤 메리트나 맛이 없음. 300억 원이나 투자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옛날 선비정신도 되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 주기 바람.

A3 알겠음. 제대로 추진하겠음.

Q4 최근 정부통계에서 발표된 충남의 농가소득을 볼 때 9개 광역 도에서 7위를 한 것으로 평가됐음. 구조적인 농정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농가소득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잘 살고 행복한 농촌으로 사람들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자는 것이 3농혁신으로 알고 있음. 3농혁신이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업을 6년 이상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금 농촌은 쌀농사가 농자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데, 그 쌀농사가 피박을 맞고 있는 상황임. 시설영농이 겨울철 영농으로서 농가수지를 높이는 핵심이고 축산이 농촌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충남쌀이 현재 시중에서 80kg 한 가마에 10만 이삼천 원을 받음.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을 가마당 4만 3천 원정도 더 받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5년 전 가격임. 3년 전에는 땅도 부족한 충남이 전국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했었으나 화학비료를 많이 줘서 땅 힘도 죽고 밥맛도 안 나게 되어 충남쌀이 전국에서 제일 싼 싸구려 쌀의 대명사가 되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삼광쌀만 수매한다고 함. 삼광쌀이 미질도 좋고 비싼 쌀이니까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삼광벼는 키가 커서 가을바람과 태풍에 약해 잘 넘어짐. 농민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내년도 농사시작 전에 각 농가의 토양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시스템을 갖추는 등 영농지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A4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Q5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겨울농사 내지 사계절 영농의 기반인 시설영농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함. 시설영농 규모가 2012, 2013년도는 약 20ha 정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였음. 2014년도에는 갑자기 2,000여ha, 620만 평이 급증했음. 2015년도에는 또

1,240ha, 370만 평이 감소했음. 이렇게 통계가 엉망인데 이런 통계를 근거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니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통계 근거가 없으면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현황을 잘 정비하기 바람. 논산의 경우는 2,000여 딸기농가 연수입이 1,400억 원 이상 되고, 1만여 쌀 농가의 소득은 1,000억 원 밖에 안 됨. 이 같은 시설영농의 핵심은 겨울철 고온방식인데, 정부는 지열 히트펌프 또는 태양열을 하라고 함. 히트펌프라는 것은 지하 수십 미터 내지는 일백 미터에서 지열을 뽑아 올리면 한겨울에도 24시간 연중 10℃, 11℃에서 12~13℃까지 온도가 올라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 투자비가 적정 3,000평, 1ha에 한 10억 원 내지 14억 원 정도 들어감. 농사를 20년 이상 지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책임. 현재 농촌에서는 통상 경유를 사용하는데 경유·중유 통계를 보면 약 70%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음.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포 열풍기라고 하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임. 대포 열풍기라는 것은 연료를 분사해서 불을 붙여서 온풍을 보내기 때문에 설비비도 싸고 가성비가 아주 좋음. 시설농가·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난방시스템은 확실한데,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나 양계장 등에서 겨울철에 계속 가동하여 이산화탄소 또는 아황산가스들이 농축되어 작업인부 건강문제, 생장하고 있는 양계, 딸기, 과채류들의 생장발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A5 지열·지중열 이용방식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감.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고주파 습식온풍기 등 저예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백낙구 의원

Q1 최근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강압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국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등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이 아닌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드 배치 중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이 틈을 이용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 국가적으로 보면 크루즈와 카페리 관광을 비롯한 여행사의 한국 담당 부서를 폐쇄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대중국 수출 및 협력 사업 또한 차질을 빚고 있음. 우리 도의 경우도 당초 오는 6월 취항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산둥성, 용안항 간 카페리 취항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중국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취소도 잇따르고 있음. 충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의 다변화와 관광 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도의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람.

A1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대 중국의 수산물 수출이 약 52만 1,000불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9%가 감소되고 있음. 또한 대산항 취항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한국이 30

억 원, 중국이 30억 원 반반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 자본금은 납입이 됐지만 중국의 자본금이 미납 상태임.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대응 T/F를 구성하여 경제통상분야, 문화관광분야, 해운항만분야에 담당 국장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음.

Q2 본 의원이 요구한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69명, 2015년 57명, 2016년 113명으로 총 23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29건, 2015년에는 32건, 2016년은 63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넘게 크게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에는 장학관·교장·교사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심지어는 신분을 은폐한 사실도 있었음.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은 5건, 2015년은 2건으로 줄고 있는 듯 했으나 2016년도에는 9건으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징계수위도 교육부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을 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정직 1월을 처분하였음. 이렇게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A2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림. 2016년 10월부터 공무원 주요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는 기본이고 추가로 성과상여금 미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근무성적 하향 평정, 국외연수 선발 제외, 각종 포상 평생 추천 제외 등의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있음.

직장교육이나 각종 연수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교육부에서는 학업수준 진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결손 보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업성취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8%p가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충남의 경우 보통학력 미달 비율은 77.2%로 2015년도 75%에 비해 2.2%p가 올랐지만 전국 평균인 80.2%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여 강원도의 75.4%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규모가 작은 충북·경북·전북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였음. 같은 충청권인 대전 85.1%와 세종 78.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충남은 4.2%로 전국 평균 4.1%보다 0.1%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강원·전북·전남·경기·세종에 이어 경남과 함께 공동 7위 평가를 받았음. 이렇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결과가 전국 하위 수준에 있는 이유와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A3 학생의 수업동기를 자극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이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분석하고 있음. 올해 실시되는 2017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고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책임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198건, 2015년 177건, 2016년 131건으로 총 506건이 발생되었으나 사건은 매년 줄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함. 그러나 가해 대상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486건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건으로 교권침해의 대부분이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유형

별로는 폭행 14건, 폭언·폭설 307건, 교사 성희롱 20건, 수업진행 방해 92건, 기타 53건이었음.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퇴학처분은 26건에 불과하고, 출석정지 142건, 특수교육 이수 120건, 사회봉사 74건, 학교 내 봉사 65건, 기타 57건으로 특히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형사처벌이 1건도 없어 교권침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숨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됨. 더 이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A4 교육감으로서 교권강화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함. 교권침해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함.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사과 또는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치유와 교단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음.





윤지상 의원

Q1 201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충남도내에는 245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의 설립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령 209개, 조례 9개, 지침 27개임. 소관 실·국별로는 복지보건국 92개, 여성가족정책관 74개, 자치행정국 44개 등이며 단위별로 분류하면 광역 78개, 기초 167개임. 예산 별로는 국비 262억 6,200만 원, 도비 216억 2,300만 원, 시·군비 271억 6,200만 원, 자부담 13억 4,000만 원임.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센터는 168개이며 전체 센터의 6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각종 센터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단기적으로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센터 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센터 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저해하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답변 바람.

A1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셨다시피 센터 역할에 대한 평가 또는 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꼭 반드시 필요한 건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는 없는지 역점을 두어서 검토하고 점검을 하겠음. 특히 유사·중복성이 있다면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

Q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 정하는 공공사무,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민간은 위탁받은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지자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공공사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주된 이유는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의 증대로 인하여 민간영역의 창의성, 전문성, 효율성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의 민간위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도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 도 전체 예산 약 5조 6,000억 원의 0.25%에 해당함.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개별조례 25건, 법적기준 23건, 기본조례 3건임. 법령·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위탁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절실함. 행정기관이 민간의 전문성, 독창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사무를 민간단체에 단순히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전문가 등이 모여 함께 토론하여 사업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직접 실행, 평가하여 민간이 자율과 책임 하에 해당 사업이 바람직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위탁사업의 운영원가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내부산정 44건, 외부기관산정 7건으로 확인되었음. 운영원가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있음이 30건, 없음이 17건, 사후정산이 4건임. 운영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내부산정이 86%,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가 33%라는 것은 민간위탁 사업계약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위탁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위탁료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김종필 의원 [본회의 2017. 2. 6. ①]

문화관광지구 내 상업시설 개방 주장

선진국의 경우 유네스코 지정지와 상업시설 연계한 관광 상품 사활... 지역 경제 활기
충남도 관광객 매년 주는 추세... 단순히 볼거리만으로 관광 흥행 어려워, 대책 강구해야

우리 충남에는 아름다운 산천이 많이 있고, 역사적인 유적지의 문화재로써 국가지정 238점과 도지정 743개 등 총 98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이 2015년도에는 18,802명, 작년에는 16,12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도리어 줄어드는 실정으로, 관광객을 더 늘리고 관광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의원이 유럽지역과 중국 등 해외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 보면,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니크 옛 시가지와 스플리트 디오클레시안 궁전 그리고 몬테네그로의 코트로 지역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적지들임에도 주거지와 상점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간대를 형성하고 문화재를 보호 계승하면서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의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시설 내에서도 상품 판매와 카페 시설이 있음을 목격 할 수 있다. 중국 유명 관광지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상업시설 지역을 거쳐야만 진·출입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경우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공산성 등 유적지구내 관광지역내에서는 문화재 보호 측면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상업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공공 묶어 놓고 있다. 관광에서 볼거리만 가지고 흥행을 할 수 없다. 볼거리에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플러스 시켜야만 관광객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 여행이 된다. 그래야만 또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 그곳을 가보라고 권장 할 수 있다. 문화재가 있는 유적지구내에서 상업 행위를 위한 공간과 시설은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보호법 제19조와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빗장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화재가 있는 역사지구 내 상업시설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위주로 운영토록 한다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수익 확대와 고용 창출 그리고 약자 배려라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정희 의원 [본회의 2017. 2. 6. ②]

노인 복지 시스템 재정립 촉구

도내 노인인구 35만108명(16.7%)으로 고령사회 진입... 2년 전보다 2만여명 늘어
경로당, 보건소, 일자리 등 시·군 우수 노인 시책 발굴, 노인복지모델로 재정립해야

지난해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16.7%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4~5년 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먼저 노인문제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전통적으로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부양이었지만, 복지국가인 오늘날 그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 정부와 사회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받아드리면서 대책 또한 정교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우리 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읍·면·동 노인 문화를 활성화하는 행복 경로당사업을 펼쳐서 노인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수혜자가 대상자의 3~5%에 불과한데다 주 1회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름만 **〈행복경로당〉** 이지 어르신들의 행복을 아우르기에는 너무 초라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시·군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사업을 종합평가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충남도 노인복지모델〉**로 재정립하여 이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노인빈곤 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노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ECD 평균 11%인 노인빈곤율의 4배에 해당하는 46.9%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노인복지정책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참여가 가능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공공일자리사업보다는 고령자 친화기업 등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질환의 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가 의료가반이 취약한 섬지역과 농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격지에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병역대체 공중보건원의 결원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고 불박이장처럼 고정된 보건진료소는 주변 3~4개 마을 100여명의 한정된 어르신에게만 의료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원과 진료소의 간호사를 통합하여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적 혁신이 필요할 때다.



김원태 의원 [본회의 2017. 2. 6. ③]

도내 4개 의료원 '간호 인력난' 가중

4개 의료원 간호사 채용 정원 632명인데 반해 현재 475명… 25% 이상 부족
업무량 증가와 노동시간 연장 및 노동강도 강화… 의로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채용승인 정원은 2016년 12월말 현재 632명인데 반하여 현재 근무인원은 475명으로 25%(157명)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진료차질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은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호봉이 많은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신참 간호사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직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경영손실은 물론이고 서비스 질 향상에 역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도 4개 의료원에 포괄병상시설 및 장비보강 예산이 150억 정도가 된다. 지금도 4개 의료원의 입원실은 환자가 입원을 하고 싶어도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실정이다.

어떻게 들으면 의료원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간호사가 부족해서 병실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며 그 좋은 시설하며 의료장비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 부족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와 의료원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옴으로 인하여 노인요양병원과 수도권 병·의원 신설과 증축 등으로 인하여 또한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 호스피스병동과 보호자 없는 병실을 증설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지금보다 앞으로 지방의료원 간호사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지금처럼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여 간호학 분야에 꿈과 희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우리 도내 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몇 년 안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충남도립대학교도 간호학과 신설함으로써 병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면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중견산업 인력양성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충남도립대학교의 학생정원을 보면 지난 2014년도에는 1,150명에서 2015년에는 1,133명, 2016년도에는 1,1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들겠지만 간호학과를 충남도립대학교에 신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7. 2. 6. ④]

충남도 방재교육단 구성 제안

개개인 재난 대응능력 필요… 재난 대응과 사고수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미국 등 선진국 국민 대다수 시민방재군 등 소속… 스스로 재난 극복 잠재력 키워

경주에서는 지난 해 9월 지진 이후로 지금까지 570여 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보령 내륙에서도 작년 11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대설, 가뭄, 태풍, 황사 등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서는 지난해 송년 기자회견과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2017년도에는 안전과 경제,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도정의 3대 핵심 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도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안전비전 2050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수립했고 금년에는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발굴하는데 모든 힘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대비가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과 미국일 것이다.

재난수습이 선진화 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갑작스런 재난이 닥쳤을 때 소방이나 경찰 등 국가가 재난을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사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피해 주민의 68%는 친구나 가족 등 이웃의 도움을 얻어서 응급복구가 실현되고 있고 또, 30%는 주민 스스로 자력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구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

하다. 아무리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를 스스로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구조능력을 키워 나가는 교육과 훈련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추진해야 할 기본 과제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2015년도부터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방재단원 개개인의 사고 대응 능력과 수습능력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방재단원들 중 전문성을 갖춘 요원으로 하여금 『방재교육단』을 구성하여 방재단원 또는 도민들의 재난대응능력과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방재교육단은 현행 제도권(법정 단체 중) 안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그들의 임무 또한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물론 재난 대응과 관련된 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2017년도가 안전과 재난에 대한 기본 교육과 훈련을 착실히 해 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유병국 의원 [본회의 2017. 2. 6. ⑤]

최근 AI 발생... 지난 13년 수치 뛰어넘어

지난 2개월간 118개 농가 5988만수 살처분... 재정 피해 934억 원 추산
천수만 등 철새도래지 중심 축사 중심으로 폐업 및 휴업 보상제도 가동해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자식처럼 아끼던 가축을 손수 땅에 묻어야만 했던 충남의 118호 농가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또 이 엄동설한에 AI 확산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에서 도 살처분 현장에서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신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충남은 2016. 10. 28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에 2016. 11. 23일 아산시 농장에서 A치ết 양성판정이 있었다. 현재까지 파행상황을 보면 2016. 11. 23일 아산시 농장에서 A치ết 양성판정 이후에 2017. 2. 2일 현재 천안, 아산, 서산 3개시 57건이 확정되었고, 118농가에서 5,988만두가 살처분되었다. 현재까지 118농가에서 5,988만수 살처분에 934억 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경제연구원 연구결과 감염률 20% 기준으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는 1,781억 원정도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 충남도는 그동안 AI예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AI발생건수와 살처분건수는 계속 증가해왔다는 사실이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 발생한 AI와 최근 두 달간 발생한 AI를 비교해보면 그 발생건수와 살처분건수가 최근 두 달간 수치가 최근 13년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AI종식을 위한 대책으로 과제별 13개 세부 추진사항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 대책이 대책에서 끝날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I전파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철새 도래지 중심인 경기 충남·충북·전남·전북 등 가칭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 발생이 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 충남인 경우에도 상습 빈번하게 발생하는 천수만·풍서천·병천천·북교천·금강하구 등 6개소 인근에 있는 축사이전과 휴업보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다만 강제 이전, 강제 휴업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이전비용 휴업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AI에 따른 재정적 수요가 934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에 약 50%정도만 이전비용 및 휴업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이전비용 및 휴업보상에 충분히 감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종화 의원 [본회의 2017. 2. 6. ⑥]

도정공백 현실화... 도지사직 내려놓아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등 각종 도내 현안 문제 산적... 시장·군수 또는 실·국장에 떠맡겨
210만 도민은 안 지사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인지 의구심... 도정 전념해야

요즘 많은 도민들이 도 살림살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도민들께서는 본 의원에게 도지사의 대권선언을 비롯하여 대권행보와 관련된 움직임들 때문에 도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왜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냐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도지사의 권력욕이라고까지 말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면서 210만 도민의 안녕과 못다한 사업을 완수하여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최근 행보를 보면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보인다.

낙후된 곳, 어려운 곳을 먼저 찾고 지역민들의 손을 잡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도민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권력 욕에 눈이 멀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도정을 내팽겨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충청남도는 도정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기반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축산악취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진한 국가공모사업, 1월 정기인사로 인한 각종 잡음들, 산하 출연기관의 비리, 도내 축산농가를 초도화시킨 조류독감의 허술한 방역체계와 대응부족 등 이러한 도내 각종 문제들을 시장·군수에게 떠맡기고, 실·국장

에게만 맡기는 것이 행정부지사의 말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최고의 파트너는 도의회라고 생각하는데, 도의회와 한번이라도 대권도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도의회하고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걸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정과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 대권도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이 과연 안희정 도지사님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사님도 생각을 바꿔 우리 도민들을 위해 도정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210만 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210만 도민을 버리는 나쁜 도지사가 아닌 훌륭한 도정을 이끌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착한 도지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른 무엇보다 도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그럼에도 끝까지 대권도전을 향해 나아가시길 원하신다면 도지사직을 내려놓으시고 대권행보를 하시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공휘 의원 [본회의 2017. 2. 16. ①]

충남 관광정책 도로명 주소와 연계해야

도 문화재·유적 인용한 사례는 2%(256개)에 불과… 국가·도 지정 문화재 합쳐도 26.1%
도로명 주소 연계 통해 정책 고유성 살릴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홍보 병행해야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도로에는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여 도로명(간선도로)을 부여하였다. 간선도로에서 분기된 이면도로(분기도로) 도로명은 간선도로명 시작점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면도로에서 다시 분기된 도로는 「간선도로명」 + 「일련번호」 + 「가나다……」 순으로 부여한다.

건물번호는 도로구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일정간격(20m 원칙)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기초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건물의 주출입구가 위치한 저점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사용한다. 충청남도의 도로명 주소 부여 현황은 시군도로 173개 구간 12,636개 주소의 분포는 지명·자연마을 이름/ 행정구역 명칭/ 기타/ 역사적 인물·기념/ 문화재·유적 순으로 나타난다. 충청남도 도로명 주소의 문화재 인용 현황을 살펴본 것인데, 현행 도로명주소 중 256개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국가지정

문화재 238개, 도지정 문화재 429개, 문화재 자료 314개 등 981개의 문화재가 각 시군별 도로명 주소에 인용된 비율을 보면 평균 26.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도로 길이를 살펴보면 53.5%가 10km 미만이고 47.5%가 10km 이상이다. 심지어 100km가 넘는 것도 있다. 정부는 2015년 도로명 주소의 사용률은 70% 후반대로 발표하였지만, 이는 '통계작성'으로 요즘은 우편물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내는 일방적인 물량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스토리텔링 사업, 백의종군로 등 여러 사업들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관광지가 아닌 곳에 관광지 전용이 갈색 표지판이 설치된 것도 있고 반대로 천안삼거리공원은 문양을 넣어 통일성을 어긴 경우,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영문표기 등이 그것이다.

충남의 문화 관광 정책이나 문화산업 정책들이 도로명 주소와 연계된다면 정책의 고유성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권역별 갈색 이정표를 따라 충남을 여행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연 의원 [본회의 2017. 2. 16. ②]

소방관 PTSD 심리치료 시스템 마련해야

잦은 외상 노출로 PTSD 장애 소방관 증가… 이와 관련 프로그램 보여주기식
2015년 설문조사 결과 PTSD 노출 위험군 2093명 중 252명(12%) 기록… 전국 상위권

충남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조속히 실행단위를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외상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4~5월경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관 930명을 대상으로 3박4일 일종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3박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위험군의 증상을 완화 또는 완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험군 대상은 이미 과거 오래전에 외상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잠재해 있던 중후군이 특정 외상사건을 촉매로 또는 잦은 외상 노출에 의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회 정도의 심리치료와 힐링 프로그램으로는 완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소방관 심리치료지원 정책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15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노출 위험군이 2,093명 중 252명으로 12%를 기록

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2016년에는 2,174명 중 184명으로 8.5%를 기록해 낮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전국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리치료지원 정책은 소방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시로 인해 충남도는 시 피해 농장주 및 살처분 현장 참여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치료 지원은 전문 상담가에 의해 정기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자주 외상 경험에 노출되는 직업군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사회적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장애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심리치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역별 치료센터 구축과 전문 상담사 배치를 제언한다. 충남도의 4개 의료원과 연계하고 현재 사업계획 중인 청소년 대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예방 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전낙운 의원 [본회의 2017. 2. 16. ③]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서둘러야”

중앙정부 사무 지방이양률 60%대 머물며 여전히 반쪽자치 자조적 표현 통용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경찰제, 금고의 지방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제시

최근의 사태는 비대해진 중앙정부와 1인에 집중된 권력의 무능함과 파탄이 국민행복 및 국가안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계에 봉착한 국가권력과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이 주민자치 속으로 들어와 도민의 삶을 밀착지원하듯이 경찰 또한 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금고의 지방화이다. 우리 도를 비롯한 교육청이나 시·군의 금고는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도 개정된 지방회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축협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에 묶여 특별회계 842억 원, 기금 82억 원의 금고를 수행할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924억 원을 수탁 받은 지방금융기관이 3년 또는 6년 후 계약

을 해지하였을 경우 일시에 잔금을 정리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령이라는 것이다. 비단 경찰이나 지방금고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세수의 80%를 정부가 독식하고 그 절반을 시·군·구·군에 배분하는 의존재원의 형태 또한 해결할 과제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시행하는 행정자치비를 벗어난 교육감 직선제로 빚어진, 잘 가르치는 경쟁보다 이념의 대결장이 된 교육풍토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일 것이다. 지방경쟁력을 살려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자치에 대해 아직도 절반의 국민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17개 광역단체장 협의회와 의장협의회, 226개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의장협의회 등 전국규모 4개의 단체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변변한 싱크탱크도 없이 4개의 협의회가 제각기 자기주장만 해오다 개헌의 길목에서도 통합된 노력은 커녕 수수방관하는 양상이다. 작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중앙사무 600여개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한 100여개 법률 일괄 개정으로 대타협의 돌파구를 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김응규 의원 [본회의 2016. 12. 16. ④]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군부대 임시 동원해야” “동성애를 보호하며 조장하는 인권법 독소조항 폐지해야”

본의원은 A(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 문제해결, 피해농가의 현실성 있는 보상, 살처분 방식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충남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항의에 부딪혀있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A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에 감염된 가금류 살처분 시 한정된 인력과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 살처분 시 자위대를 동원한 사례를 보듯이 우리도 군부대를 임시 동원하는 정책을 건의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주변축산농가의 재입식에 관한 문제다. 계란생산을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A 긴급 행동지침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살처분 농가와 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의 차등입식을 하여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1년에 5회전박에 못하는데 A 발생하지 않았거나 살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입식을 못하고 있는 육계농가의 어려움을 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충청남도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충남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30여개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인권침해’,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조문에 위험성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종교(이단포함), 임신, 출산,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며 차별 금지화 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정서와 도덕윤리가 무너지는 인권기본계획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이란 명분하에 사회통념에 벗어난 인권위법 중 문제되는 부분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도 전면 개정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은 폐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7. 2. 16. ⑤]

교육격차 해소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절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일수록 교육정책 지원 미비... 도가 나서 균형 맞춰야

최근의 교육동향을 살펴보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함께 교육협력 사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일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진로 체험처 발굴과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지역특색교육 실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새로운 지역교육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활동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자원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정책과 활동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형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과 아산, 논산, 당진 3개 지역 지자체와는 '충남 행복교육시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3개 지역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로서 현재도 교육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여 농·어촌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교육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청의 재정부담은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사업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까지 아우르는 도청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해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과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 지역과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농현상이 많은 농·어촌 지역까지 상생하는 협력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통합하여 규모있게 학교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흠의 소중함을 알고 다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학교교육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드린다.

정광섭 의원 [본회의 2017. 2. 16. ⑥]

안면도 주민들 높은 도유지 임대료에 다중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 여지없어... 해묵은 갈등으로 남아
안면도 주변 2868필지 도유지에서 1604명 임대... 임대 수입만 약 7억 원에 달해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 농사지어서는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에는 긴 가뭄으로 밭 작물은 타들어가고 논에서의 벼는 염해피해를 입는 등 어렵게 농사를 지었지만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업인 손에는 빚만 남고 말았다. 충남도에서 임대하는 논·밭 임대료도 내려야 되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 2010년도에 본의원이 태안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도유지 임대료 영수증을 도지사께 보여주면서, 충남도가 도민상대로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 있어 도둑들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그 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래도 쌀 1가마 값이 10만 원인 지금 아직도 임대료가 200평당 14만 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안면도 도유재산은 4,951필지이며 임대필지 현황을 보면 2,868필지에 1,604명이 임대를 하고 있고, 전년도 임대수입은 경작과 주거용으로 총 625,283,000원이었다. 다른 임대 수입까지 합치면 약 7억 원이 조금 넘는다. 그리고 안면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거용 임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 결정해서 올해 안에 다 매각이 될 것으로 본다.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농지가 좋고 나쁨을 구분하여 임대료를 차이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토질이 좋고 농사를 짓기가 좋다면 조금 더 임대료를 주고라도 토질 좋고 농사짓기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가 거의 비슷하고 임대농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토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구분하여 많은 임대료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논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전년도 쌀값이 없다보니 1마지기 즉 200평에 10만 원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200평에 쌀 1가마 값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태안 지역은 통상 200평에 쌀 1가마 값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임대료로 14만 원을 받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임대를 포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낸 임대료만 가지고도 그 도유지를 사고도 남았다. 안면도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 아밤에 산에 가서 산림감수 몰래 밭을 일궈 보리를 심어 먹던 땅이 현재 도에서 임대료 비싸게 받는 땅인 것이다. 그냥 공짜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맞게 임대료를 재조정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송덕빈 의원 [본회의 2017. 3. 27. ①]

충남도 6.25 참전 유공자 예우 외면

일부 시·도와 달리 6.25 참전 영웅들에 대한 명예 수당 기초단체에 떠넘겨
도내 참전용사 7500여명… 대부분 80세 이상 노병으로, 명예수당 지급해야

본 의원은 6.25 참전 유공자 분들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도비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한다. 6.25 전쟁은 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 전 국토의 98%가 적에게 점령당하고 초토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극히 비관적이고 참혹했던 전쟁이었다. 이토록 처절했던 구국전쟁에서 6.25 참전 노병은 뿐이다. 이러한 6.25 참전의 특수성에서 2013년 승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래 참전 유공자 중 유일하게 6.25 참전 유공자에게 호국영웅의 명예를 수여하였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 주역은 6.25 참전 노병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분들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2014년 이후 지난 3년간(2014.1~ 2016.12) 전국적으로 약 38,000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국가보훈처 등록 6.25 참전유공자 10,457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7,531명으로, 약 2,926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3년 대비 약 28%의 유공자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우리 도내 시·군 자치단체는 세계 경제가 어렵듯 재정여건이 지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 유공자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명예수당과 미망인 복지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예산 일부를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릴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로는 호국영웅 노병들이 초고령으로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확인결과, 현재 광역지자체인 서울(월 5만 원), 부산(2만 원), 인천(5만 원), 대전(5만 원), 경기(1만 원), 경북(1만 원) 등이(국가와 기초지자체의 지원과는 별도로) 자체재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저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 노병분들께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 노병님들께 더 없는 예우를 한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한시법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이 어렵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 정의 실현과 애국구국 실천의 높은 뜻에서 참전 명예수당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후 노병님들의 노후 안정과 편히 임종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의원 [본회의 2017. 3. 27. ②]

안면도 도립 힐링 연수원 건립 제안

도내 타 지자체 휴양소 운영 중… 해당 지자체 지역민 여가 선용 기회 제공
안면도 도유지 활용한 연수원 건립 시 생산유발액 688억 원 등 경제 활성화 기대

도민의 여가활동에 필요하고,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는 도립 힐링 연수원 건립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 도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전국 교통망의 요충지로 영·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내재된 지리적으로 강점을 지녔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민의 소득증대와 주 5일근무제 정착 등에 따라 볼거리 관광에서 자연체험과 휴양, 교육 위주로 여가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점점 높아지는 도민의 여가 선용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립 힐링연수원을 건립하여 휴양과 교육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내 타 자치단체 휴양소 건립 사례를 보면 서초휴양소가 객실 47개, 동작휴양소가 객실 23개, 서울시 서천연수원이 객실 150개 규모로 오래전부터 건립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대전에 학생수련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안면도 도유재산 중 일부분을 활용해 도민들을 위한 휴양과 교육, 여가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도립 힐링연수원 건립을 제안한다. 안면도 전체면적 3분의 1이 우리도의 공유재산이다.

연수원 건립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서해안 고속국도로 인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제꽃박람회, 대하 축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4계절형 관광지로서 연중 관광객들로 붐비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본의원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조성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분석하는데, 이를 서초구청 규모로 도립 힐링 연수원이 건립된다면 생산유발액 688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340억 원, 취업 유발효과가 1,017명으로 추정된다.

도립 힐링 연수원은 도민은 물론 일반관광객 등에게도 동일한 민간 시설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면 공공기관에서의 휴양소 운영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본의원이 제안한 도립 힐링 연수원 건립에 대해선 도의 문화관광 분야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있고, 도민 복지증진도 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사업이라 판단된다. 현명한 정책적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형달 의원 [본회의 2017. 3. 27. ③]

충남 체육 발전을 위한 제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체육 정책 수립 촉구
전국체전 참가종목 조정 및 도민 체전과 생활체전 통합 필요성 제기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방침에 따라 충남체육회와 충남생활체육회는 2016년 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통합되었다. 그간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여러 국제대회들을 유치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체육회가 발 벗고 인기 종목들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생활체육회가 엘리트 선수들 이외의 체육활동을 즐기는 많은 도민들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지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 운영되면서 체육계에 비효율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같은 종목일지라도 생활체육, 전문체육 간에 교류나 협력이 없어 발전을 저해하며 인적, 물적 자원이 중복 투자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통합이 물리적 통합이었다면 앞으로 화학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체육의 선진화 방안이다. 그동안 전문체육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는 저출산에 따른 선수 감소와 부모들의 자녀가 체육선수로의 진출 기피 현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체전의 참가종목 조정은 물론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전 대회통합 등 전문체육의 전반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심화방안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활성화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정책을 보다 심도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는 양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극대화 방안이다. 25년 만에 두 단체가 하나로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니만큼 한 지붕 아래 놓여있을 때 집단 이기주의가 일어날 수 있다. 두 기관의 통합은 새로운 시스템 및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재·개편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엘리트 선수, 동호인 등 모든 체육인들을 위해 존재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큰 기관으로 통합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역효과만 커질 것이다. 앞으로, 통합에 따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남체육회가 되길 바란다.



정광섭 의원 [본회의 2017. 3. 27. ④]

안흥성 국가문화재 지정·승격 서둘러야

남·서·북면 바다와 접해 있어 조선시대 왜구 침입 막고 서해안 방어 요충지
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방치... 관광자원화 통해 경제 활성화 이끌어야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대에 있는 안흥성의 가치와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안흥성은 조선시대 효종때에 축조된 석성으로 인근 19개 지역 민중이 동원되어 10년 만에 축조되었고, 높이가 3.5m, 둘레가 1,568m로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았으며, 안흥진성이라고도 불리었다. 현재는 성안에 4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당시 안흥성의 규모를 보면 동헌, 내·외관청, 객사 등 많은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었고, 동문은 수성루, 서문은 화현루, 남문은 북파루, 북문은 경성루라 불리웠는데, 다행히 성과 성문터는 비교적 원형대로 잘 남아 있는 상태다. 안흥성은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곳이었으며, 각도 수군에 두었던 종3품 외관직무관인 수군첨절제사를 두어 관할하였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는 곳이었다. 그러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안의 건물이 일부 불에 타고 폐성되었는데, 그후 1901년에 일부 남은 건물을 뜯어서 태안군청과 부속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안흥성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6년 1월 8일 충청남도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현재는 거의 방치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곽문화재를 잘 활용하고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한 곳이 있다. 바로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일대에 있는 낙안읍성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면적 223,108㎡로 건물이 108동이나 있고,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이다. 1984년부터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낙안읍성의 원형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토대로 성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오늘날과 같은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충남의 가장 서쪽에는 안흥성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문화유산이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지사님께 건의드리다. 도 문화재 사업방향은 보수가 원칙이고 복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하기 어려우니 안흥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국비와 지방비로 복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흥성이 꼭 복원되어 선조들의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정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본회의 2017. 3. 27. ⑤]

도정공백에 따른 도와 의회 간 협치 주문

안 지사 대권행보로 인한 도정공백 우려... 각종 현안 해결 도와 의회간 머리 맞대야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지원 등 민생안정대책과 국비 확보 철저한 계획 세워야

충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희정 도지사가 장기간 대선행보에 나섰다. 이로 인해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다. 도지사가 이번 경선에 실패하더라도 그 이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소속 정당의 흥행과 차기 대권 전략 등의 이유로 정치활동이 예견된다. 도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주요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경선 참여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도지사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도정공백이 발생한다. 도민들이 애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도정이 위태롭고 우려된다는 여론 또한 지배적이다. 이러한 위기상황 일 때 집행부에선 도내 각종 현안과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회와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정의 큰 현안에 대해 도의회 협치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도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도정이 안정되고 도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

는 기우라는 말이 있다. 본의원이 도지사의 도정공백을 걱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도민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민생안정 대책을 역점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생필품 물가와 취약계층, 전통시장 지원, 예산 조기집행 등에 힘을 쏟아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주시기 바란다. 둘째 최근 정국상황이 급변되고 있다. 내년 국비확보와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직자로 품위와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와 협치를 굳건히 해주시기 바란다.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금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가뭄극복을 위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시의 극복과 구제역 방제, 산불 예방 등 우리도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도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의회와 협치는 도민과의 협치이다. 도지사의 도정공백이 서민 경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도정을 운영해 주길 당부드린다.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7. 3. 27. ⑥]

윤봉길 의사 관심 절실... 지원체계 강화해야

매헌 윤 의사 고귀한 헌신과 희생정신 기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성 제기
현재 추진 중인 행사 대부분 열악... 학생들에게 희생정신 알리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윤봉길 의사는 22세의 젊은 나이였던 1929년 4월 23일 37명의 발기인과 뜻을 모아 기존 야학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월진회”를 창립하였다. 초대 월진회 회장에 취임한 윤봉길 의사는 야학을 통한 계몽활동, 농촌 개발 및 부흥을 통한 경제발전, 문예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창의적인 국민정신 함양 등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윤 의사는 1930년 중국으로 건너가 1931년 겨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인 김구를 찾아가 “한민애국단”에 가입했다. 윤 의사는 김구 선생과 함께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천황의 생일연과 상하이 전승기념 행사장에 폭탄공격 계획을 세우고, 1932년 4월 29일 11시50분 일본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폭탄을 단상에 던졌다. 이 날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야요시노리”와 상해 일본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등을 처단하고, 총영사 “무라이”, 주중국공사 “시게미쓰마모루”에게 중상을 입혔다. 윤 의사는 1932년 11월 18일 오사카 육군 형무소에 수감되어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형무소에서 총상을 당하셨다. 이 위대한 윤봉길 의사의 애국사상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왔는가? 매년 4월 29일 단순히 기념행사와 식사 한 그릇 나누면 되는 것일까? 지금 일본은 정신대도

동원 안 했다. 731생체실험도 안 했으며, 심지어는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측에서 윤봉길 의사의 동북아평화생명사랑을 더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에이메 대학의 어느 교수는 에이메 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윤 의사 고향인 덕산에 와서 윤 의사의 평화운동을 체험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이메 대학에 답방 형식의 일본캠프를 전개하면 동북아 평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과 도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월진회를 통해서 예산교육지원 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 성지 답사와 윤 의사가 총살당한 ‘가네자’ 순국의 길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1929년 3월 28일 세워진 월진회가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과 뜻 있는 분들이 함께 윤 의사의 애국애족 사업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심어 줄 수 있게 윤봉길 의사 관련 행사가 좀 더 알차게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중화 의원 [본회의 2017. 4. 6. ①]

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발전소 사용되는 연료 폐비닐 등으로 만든 SRF... 자칫 주민 건강 및 정주여건 걸림돌
국제 에너지기구나 유럽 연합 등 고품폐기물 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않고 있어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도청인근에서 매일같이 열병합발전소 건설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년 완공되는 내포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는 액화천연가스인 LNG가 78%, 고품폐기물 연료인 SRF가 22%로 구성 되어 있다. 문제는 고품폐기물 연료인 SRF다. 고품폐기물 연료는 비닐 등 폐기물로 만든 것으로 이 연료로 발전소가 가동되면, 내포신도시는 1년 내내 고품폐기물을 태운 매연으로 가득 차 신도시의 정주여건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입주업체 측은 배출설계기준을 LNG 수준으로 강화했고,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나 유럽연합에서는 고품폐기물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 12개의 폐비닐 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이중 단 한국도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는 없고, 외곽지역 반경 5km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전국 12개 발전소 전체용량이 87메가인 반면, 내포신도시는 SRF 22%, 발전소 용량이 무려 66메가로 대규모인데, 이는 전국의 폐비닐 쓰레기 자원을 내포로 가져오겠다는 발상이다. 하루 710톤의 폐비닐 쓰레기를 소각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등 개인사업자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발전소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한 전국에서 오가는 폐비닐 운반트럭의 소음과 교통체증, 폐비닐의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중금속,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 기형아 출산, 각종 암 등 알 수 없는 병으로 내포신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SRF사용시설은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LNG보일러 시설의 약 660배에 달하는 먼지가 배출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미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마쳤다. 믿어달라는 식의 대처는 평소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도민참여 도정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도시의 성패는 쾌적한 정주여건이다. 도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은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7. 4. 6. ②]

일부 학교 전입생 거부... 갑질 횡포

천안 일부고교 내부규정과 취업률 하락 등 부당사유 들어 횡포... 학습권 침해
취업률에만 혈안이 된 학교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헌법 제31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내부규정, 취업률 하락 등을 이유로 전입생을 외면하고 있다. 천안지역 특성화중 OO여상에서는 내부규정과 취업률 하락 등을 이유로 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전입 희망자 60~70여 명 중 단 한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은 OO여상과 OO상고, 농업계열인 OOOO고를 몇 차례 오가며 결국 자신이 꿈꿔왔고, 자신인 배웠던 전공인 상업계열 학업을 포기하고 농업계고등학교에 전학하였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OO여상은 충남전체 119개 고등학교 중 단 한 차례도 전입학생을 받아준 전례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OO여상은 천안에서 유일한 여자상업고등학교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 행위를 펼쳐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3일 전국 최초로 단 한명의 입학생을 위해 보령시 녹도 섬마을에 학습장을 설치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6년 학생 수 감소로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가 폐쇄됐던 보령시 녹도

에 10여년 만에 다시 학교 교육이 재개된 것이다.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단호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도 교육감께서 교육의 본질, 마을에서 학교의 역할을 돌이켜볼 때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근본정신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정작 타 지역 전입생을 받지 않고 외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수많은 전화와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OO여상의 주장을 보면서 충남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 의원은 바람직한 교육의 목적이란 '극단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에서 설정되어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알고 있다. 교육감의 정책이자 교육철학이 일선 학교현장에 녹아들도록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더욱 경주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을 외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조이환 의원 [본회의 2017. 4. 6. ③]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 어민 피해 해결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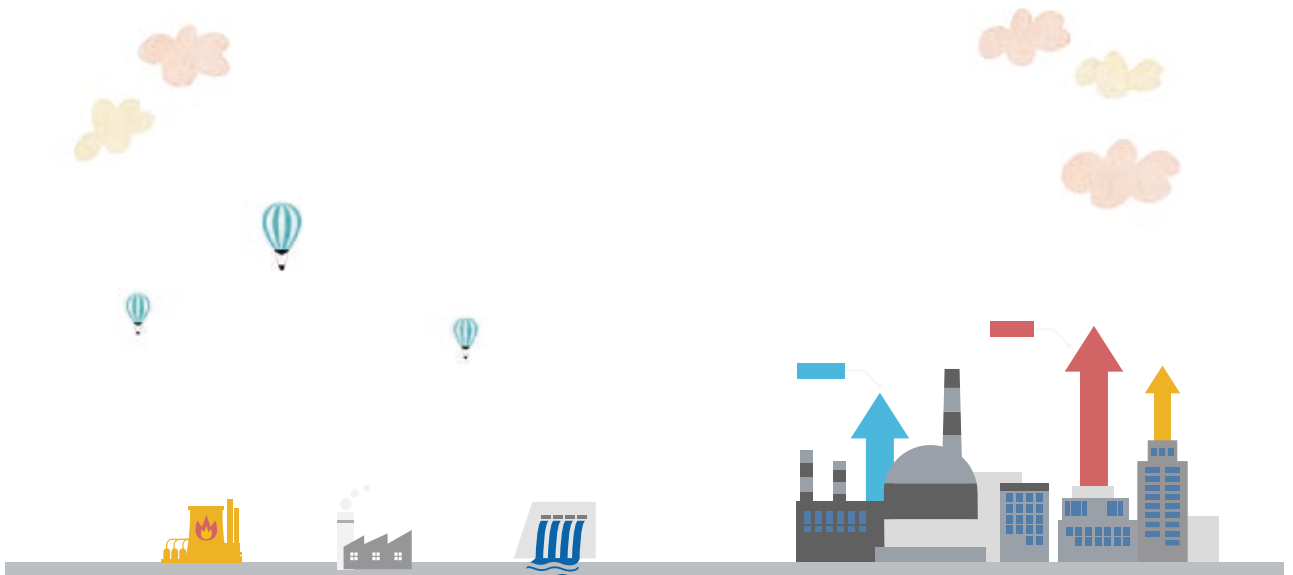
발전소 건설 둘러싼 지역 어민과 한국중부발전 간 갈등 격화… “도가 적극 대응해야”
서면어민협 “안전진단서 일부러 빠뜨려” vs 한국중부발전 “고의누락 아닌 실수일 뿐”

지난 2015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하기 위한 의제 처리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심도 깊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 고시함으로써 최근 서천군 서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서천군은 신서천 화력발전소의 건설부지가 일반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상당히 인접하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어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용과 해결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했다. 구체적인 주요 지역주민요구사항 6개 중(2항)해상시설물 취, 배수구, 접안시설공사로 인한 어민피해로 오탁에 의한 어 자원 감소, 어선 조업구역 축소, 항로피해 등에 대한 공사 전 피해 영양조사 실시, (4항)취 배수구에 따른 해상피해인 동식물성 플랑크톤 및 치어피해에 의한 어 자원 감소 등에 대한 공사 전 피해영향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제사항인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허가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한국중부발전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해상에서 선박 등 운영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서로 해상공사 전에 어민들의 안전대책 및 피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해사안전법 제15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발전이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해준 것은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19만평의 바다에 대한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양식어업, 어선어업, 낚시 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공사 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한국중부발전은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장의정



문화복지위원회(2. 9.)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현장 점검 나서

- 2·3지구 본격 추진에 따른 인허가 업무지원 등 행정력 집중과 기관 간 결속 당부
- 순수 자립형 우수농촌체험마을 성공요인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 접목 방안 마련



행정자치위원회(3. 30.) 도 공유재산 심의 앞서 현장점검 실시

- 도 소방복합시설 건립현장 및 계룡소방서 신축 현장 방문
-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 위한 입지 장소 선정 등 적절성 점검



농업경제환경위원회(3. 30.) 가뭄 현장 찾아 대응책 논의

- 충남 누적 강수량 58.9mm로, 평년 대비 63.4%에 머물러... 대응책 고심
- 보령댐 저수율 14%대로, 수원이 고갈돼 서부권 생활·공업용수 공급 비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3. 30.) 대량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현장점검

- 현대오일뱅크 정제·생산시설 등 찾아 자체소방대 역할 중요성 강조
- 국제여객선터미널 방문해 사드보복 대비한 취항 문제 해법 모색



교육위원회(3. 31.) 유아체험 운영 예산 증액해야

- 유아교육진흥원 전기로 교육용 아닌 일반용 책정, 과도한 예산 소요

의회 운영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에 따른 제295회 임시회 일정변경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당초 5월 9일에 개의회 예정이었던 제295회 임시회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에 따른 임시 공휴일로 5월 11일로 변경),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사했다.



김종문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응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지상 의원 이공휘 의원 이용호 의원 정광섭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복합시설 및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제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사업 타당성 및 부지 매입 과정 문제점 발견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서 2곳 건립안 심사 삭제... 재검토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4월 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내포혁신플랫폼을 비롯한 충남 인성학습원, 계룡소방서, 충남 소방복합시설 등을 신축·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 소방복합시설과

내포혁신플랫폼 건립은 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소방복합시설 및 내포혁신플랫폼 건립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공유재산 승인 후 부지매입과정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위는 120충남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



신재원 의원



김석곤 의원



유익환 의원



김종문 의원



이종화 의원



이공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안면도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추진

2018 세계 튼립 꽃 축제 앞두고 안면도 1지구 도유재산 50% 감면
대부료 감면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명품 세계 꽃 축제 기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4월 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앞서 안면도관광지 1지구의 경우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자 유치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다 보니 1지구 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제기돼 왔다.

도는 민자유치 전까지 도유재산 대부료의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2018 태안 세계튼립 꽃 축제'를 개최, 충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날 동의안 심사 과정을 통해 대부료 감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명품 세계 꽃 축제를 통한 충남 관광 발전을 당부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대규모 꽃축제가 추진되는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며 "꽃지 해안공원 일원의 노점상 불법영업으로 인한 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통합을 골자로 한 '도 양성평등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이기철 의원



김홍열 의원



조길행 의원



김 연 의원



김원태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6차산업 제품 안정적 판로 확보 기반 마련

6차산업제품 기획판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홍보·판촉활동 전개 및 재구매 강화 기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 콩, 과일 등 6차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용일)는 3월 28일 ‘충남6차산업제품 기획판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우수한 농식품에 대한 수도권 및 지방의 대형매장 등에 참여, 홍보·판촉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

기관 또는 유통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용일 위원장은 “도내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총 94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가 등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했다.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



김문규 의원



송덕빈 의원



유병국 의원



김복만 의원



김응규 의원



홍재표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 지원 기반 마련

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내달 6일 본회의 심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최대 2000만 원 등 활성화 기대



충남도내 한옥 등 우수한 건축자산을 보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맹정호)는 3월 28일 열린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충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해야 한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추진사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10명 이내

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맹정호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며 "그동안 운영해 오던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



조이환 의원



홍성현 의원



유찬종 의원



전낙운 의원

교육위원회

학교 공사현장 임금체불 문제없어야

관련 민원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월 7일과 2월 8일 양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학교 공사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일부 신설학교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해 공기 증가로 개교가 지연될 소지가 있어, 도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의 거점에 소재한 남부평생학습관 등의 평생교육 시설들이 시·군에 있는 도서관과 기능이 중복 되므로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게 타 평생교육 시설들과

차별 있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주권수호 및 안보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교육 자료를 보급해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



이진환 의원



김용필 의원



백낙구 의원



서형달 의원



오배근 의원



오인철 의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찾아 내포문화권 활성화 논의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 모범사례 내포신도시 접목 방안 마련... 신도시 정주여건 변화 기대
안동 예천 등 지역 간 균형발전 청사진 뚜렷... 관광과 레저, 연구시설, 대학 등 기능 강화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4월 4일과 4월 5일 양일간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및 유교문화권 개발 현장을 찾아 내포문화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 모범 사례를 내포신도시에 접목할 예정이어서 향후 신도시 정주여건 변화에 기대가 감돌고 있다.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내포특위는 첫날인 4월 4일 경북도의회와 신도시 홍보관, 신도시 건설단 등을 차례로 찾아 내포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모색했다.

이튿날인 4월 5일에는 유교문화박물관과 안동하회마을을 찾아 박물관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단순히 신도시를 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라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특위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1·2기로 나뉘어 구성·운영되고 있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특별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등 찾아 대응방안과 정책 방향 모색

보령과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및 지역민 만나 피해 규모와 대응방안 논의
도내 총 25기 달하는 화력발전소 2022년 추가 9기 건설 또는 계획 중... 도민 불안 가중



충남도의회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현장활동에 본격적인 쇄도를 당겼다.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표)는 2월 14일과 2월 15일 양일간 서천·보령석탄화력발전소와 태안 화력발전소 등을 각각 찾아 미세먼지 및 유해환경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앞으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특위가 파악한 도내 화력발전소는 총 26기에 달했다. 전국에 분포된 화력발전소가 53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이 충남에 밀집된 것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가 2022년까지 추가(9기)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홍재표 위원장은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태우면서 분진 가루가 발생하는데, 이 가루가 대기 중의 오염물질과 결합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발생된다”며 “이 미세먼지는 결국, 우리 몸속에 침투,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굴 폐사와 관련해서도 “태안군과 화력발전소 협의를 통해 피해용역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의 동의를 이끄는 데 충남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원주장



장기승 의원
(1. 9.)

도내 영양(교)사 업무 과중 해소

도내 2식 이상 급식학교 34명의 추가 인력 배치로 근무환경 개선 앞장

충남도내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침, 점심 또는 점심, 저녁 등 2식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인력이 배치된 덕분이다.

1월 9일 장기승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의 업무경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4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3식 이상 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끼니를 챙겨야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업무시간이 과중, 급식 및 영양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실제 2식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간 약 500~1000회까지 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교)사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수용, 1일 급식 학생 수 1500명 이상의 2식 급식학교에 7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또 1일 급식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3식 급식 학교에 27명을 배치했다.



김용필 의원
(1. 10.)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재산권 침해 심각

LH로부터 토지 매입한 주민 등 재산권 침해로 반발... 홍성지역과 대조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에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 대금을 완납했지만, 약 1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대출, 담보, 처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0일 김용필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용지인 삽교읍 목리 협의 양도인택지(RD-1블록) 총 211필지(5만6000㎡)를 분양했다.

현재 총 211필지 중 3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양 대금이 완납된 상태이며, 120필지는 올 상반기 완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LH가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한 180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매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홍성지역 협의양도 인택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주장



홍재표 의원
(3. 14.)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태안군 포함해야

다양한 논리 개발 등을 통해 대선 후보와 각 정당 설득할 터... 대선 공약화 추진

홍재표 의원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에 태안군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지난 3월 14일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양한 논리개발 등을 통해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전달하는 동시에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충남 서산(대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총연장 340 km, 총사업비 8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2013년 10월부터 추진했으나, 2016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된 상태다.

홍 의원은 “동서횡단철도는 물류수송과 관광산업벨트 등 동·서간 연결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이라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을 눈앞에 둔 만큼 태안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좋은민주주의 충남포럼을 비롯한 문재인 후보 역시 이 사업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태안군 발전과 지역 간 상생,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태안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승 의원
(4. 4.)

충무교육원 내 WEE스쿨 이전해야

충무교육원의 본래 설립 취지 및 운영방향 퇴색 우려... Wee스쿨 이전 필요

충남 아산 소재 충무교육원 내 Wee스쿨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무교육원과 Wee스쿨(공립형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동시 운영될 경우 양 기관의 본연의 역할이 퇴색되거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충무교육원은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이어받고 계승 발전시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격체를 기르는 게 본래의 목적이다.

하지만 현재 Wee스쿨과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충무교육원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장 의원은 “충무교육원은 충무공의 정신을 함양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만큼 Wee스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Wee스쿨을 이전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도내 설치된 유아교육 지원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 한 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유아체험과 유치원 교사의 연수 지원 등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293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조례안 14, 동의안 1 원안가결 12, 수정가결 3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충청남도 조직 개편(2017.1.1.)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 홍보협력관실 명칭 변경 : 공보관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으로 변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보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제보 기간, 방법, 처리절차,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품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일체 정비사항을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구성 조례안	대표발의 : 김중문 의원 (김명선, 이공휘, 김 연, 유병국, 윤지상, 오배근, 홍재표, 조이환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조례안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동욱 의원 (김종필, 김석곤, 유익환, 김중문, 이공휘, 신재원, 이중화 의원)	원안가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범죄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각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각종 시상조례를 충청남도포상 조례로 통합하고 각 부문별 수상인원, 포상자에 대한 예우 등을 신설 -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충청남도 문화상, 충청남도 모범장애인상, 충청남도 환경보전 대상, 충청남도 건설인상, 충청남도 4-H대상 신설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7.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결과 반영 - 조직개편에 따른 분야·과명칭 변경 및 소관 위임사무 정비
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행정자치부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 조정 - 미래성장본부 신설 (지속가능정책과, 신성장동력과, 산업기반과) - 정원의 총수(제70조) 4,361명→4,362명(1명 증)
조례안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유관순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국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도비보조금 운영비 지원 규정을 법령에 맞게 보완 - 유관순상 수상후보자 추천 국내제한 폐지 - 유관순상위원회 사업비 관리 법적근거 미비점 보완
동의안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위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년10월(2017.3. 1. ~ 2019.12.31.) - 위탁사업비 : 매년 15백만원(도비100%)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 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 연 의원 (홍성현, 정광섭, 맹정호, 조이환, 전낙운, 조치연, 유찬중 의원)	수정가결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택시 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광섭 의원 (맹정호, 조치연, 조이환, 홍성현, 유찬중, 전낙운 의원)	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으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 - 위반행위자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2017. 3. 1자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 정리 - 학교폐지 : 4개교(초등2교, 병설유치원 2개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2016.9.22.)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완·정리하기 위함

제294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조례안 7, 동의안 8, 결의안 2, 기타 1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2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결산검사 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구에 맞게 정비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과 등록,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기능, 등록,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등을 규정																				
결의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안가결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위 원 수 : 10인 이내 - 소 관 : 특별위원회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관리계획내역 <table><tr><th rowspan="2">연 번</th><th rowspan="2">회계별</th><th rowspan="2">안 건 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산현황 (단위:㎡, 천원)</th></tr><tr><th>종류</th><th>수량</th><th>면적</th><th>재산가액</th></tr><tr><td>1</td><td>특별회계</td><td>계룡소방서 신축</td><td>취득</td><td>건물</td><td>1동</td><td>3,410</td><td>8,086,000</td></tr></table>	연 번	회계별	안 건 명	구분	재산현황 (단위:㎡, 천원)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특별회계	계룡소방서 신축	취득	건물	1동	3,410	8,086,000
연 번	회계별	안 건 명	구분	재산현황 (단위:㎡, 천원)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특별회계	계룡소방서 신축	취득	건물	1동	3,410	8,086,000																	
동의안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민원상담 창구인 「120 충남콜센터」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 하고자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기존계약 만료일 : 2017. 3. 31. - 위탁기간 : 9개월 (2017. 4. 1. ~ 12. 31.) - 계약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도비 179백만원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이 해촉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신임 위원을 위촉하고자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table><tr><th>성명</th><th>주소·주요경력·위촉사유</th></tr><tr><td rowspan="3">정병희</td><td>•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td></tr><tr><td>• 충청남도 총무과장 • 당진시 부시장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td></tr><tr><td>※ 도정의 다양한 분야 근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현장 민원을 경험</td></tr></table>	성명	주소·주요경력·위촉사유	정병희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충청남도 총무과장 • 당진시 부시장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 도정의 다양한 분야 근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현장 민원을 경험
성명	주소·주요경력·위촉사유									
정병희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충청남도 총무과장 • 당진시 부시장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 도정의 다양한 분야 근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현장 민원을 경험									
동의안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출연기관 : 충남문화재단 - 2017 무지개다리사업 출연 : 20백만원						
동의안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로 감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18. 태안 세계튤립꽃축제 등」의 제안사업 검토결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로 감면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대부기간 : 5년간(2017. 6. 1. ~ 2022. 5. 31.) - 대부재산 : 태안군 안면을 승언리 산29-122외 23필지 - 감면율 : 50%						
동의안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충남 6차산업 제품의 기획판매 지원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유통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위탁기간 : 3년 (2017 ~ 2019) - 소요예산 : 도비 100백만원						
동의안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위탁기간 : 3년 (2017 ~ 2019) - 소요예산 : 198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화 의원 (김기영, 오배근, 김용필, 신재원, 유익환, 맹정호, 홍성현, 김종문, 정광섭, 김동욱 의원)	원안가결	내포신도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발예정 지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필 의원 (맹정호, 홍성현, 유찬중, 정광섭, 조이환, 전낙운, 조치연, 김종문, 이종화 의원)	원안가결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 하기 위한 -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 규정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한옥 신축시 비용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백낙구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공개하는 등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 확보와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규정 (재원 30억 원 이상 사업, 3천만 원이상 연구용역)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공개하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백낙구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가결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 생존수영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동의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수정가결	관리계획내역					
				연 번	기 관 명	면 적(㎡)		기준가격(천원)	비 고
					취 득 계	토지	14,796	8,300,000	
						건물	21,675	41,028,354	
						계	36,471	49,328,354	
				1	가칭 “천안꿈 이룸학교”	토지	1,107	150,000	특수학교 신설
						건물	4,503	9,737,001	
				2	천안두정 초등학교	토지			(기부채납) 교실 증축
						건물	982	2,007,353	
				3	가칭 “공수초등학교”	토지	13,689	8,150,000	신설
						건물	14,173	26,584,000	
				4	배방초등학교	토지			(기부채납) 교실 증축
건물	2,017	2,700,000							
결의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전낙운 의원 (강용일, 정광섭, 송덕빈, 김석곤, 유익환, 이기철 의원)	원안가결	정부에 대하여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지 말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 즉각 철회와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 결손 처리를 강력히 촉구					
기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안가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연구모임(2. 22.)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활성화 방안 제시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과거와 현재 역할 분석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점차 축소·변모되는 점을 우려, 타 민간자율봉사단체와 비교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 발전 방향을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홍 대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에게 확고한 역할인지와 재난현장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자율봉사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호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임에는 김문규 의원, 조이환 의원, 장기승 의원, 오인철 의원을 비롯한 김연웅 천안시의원, 강창환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 총 2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충남형 유아교육발전 방안 연구모임(3. 14.)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모색

서형달 의원, 충남형 유아교육발전방안 연구모임 창립... 유치원 교육 실태 파악

충남도의회가 유치원 돌봄교실 활성화 등 도내 유아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에 첫발을 뒀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아교육발전방안 연구모임’(대표 서형달 의원)은 지난 3월 1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와 영유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유아 중심의 행복한 유치원 운영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들은 이날 도내 유치원 교육의 실태와 현황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운영을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회원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서 대표는 “연구모임을 통해 도내 유아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유치원 교육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예산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유치원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향후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11월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모바일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3. 27.)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 정책 개발 연구 나서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가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연구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모바일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 의원)은 3월 27일 도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도내 축제, 상권, 생활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발족했다.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사회 전반에 모바일빅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졌다”며 “공공부문에서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된 만큼 지역의

다양한 자료와 연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향후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4. 6.)

다문화 가정 체계적인 교육 여건 및 문화개선 나서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 다문화 사회 필요한 감수성 함양과 교육방향 논의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가정의 체계적인 교육 여건과 문화개선에 나선다. 충청남도의회 다문화 가정 감성교육 연구모임(대표 김홍열 의원)은 4월 6일 창립총회를 열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감수성 함양과 교육방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정정희, 윤지상, 김원태, 정광섭 의원 등 다문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모임은 이날 다문화 교육의 주요 쟁점사항을 비롯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다문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대표는 “다문화 교육 관련 각종 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사례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해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모임을 실속 있게 운영해 좋은 정책 제언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여군 농업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3. 21.)

농촌 현실 진단 및 경제 활성화 대안 발굴 노력

강용일 의원 요청... 부여군 농업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3월 21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여군 농업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용일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본부장이 '농업·농촌 발전 방향 제언'에 대해 주제 발표를,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과 김길환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최재욱 구룡농협 조합장, 백승민 세도농협 조합장, 임기영 부여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부여군은 25.1%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충남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최근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여군의 고령화 비율은 28.9%로 도내 최상위 수준으로 올랐다"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4.7%에 달하는 등 농촌이 위기로 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농업·농촌의 장애 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 농촌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협의회

2. 8.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중앙의 관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야... 헌법 개정 통해 지방정부로 발돋움해야

전국시도의회협의회가 지난 2월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수원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는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 기능은 국가의 총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입비율 역시 국가 80%, 지방 2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헌법 제118조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중앙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형태(통치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윤 회장은 “지역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 지방분권 개헌 한목소리 내기로

공동성명서 발표 및 국회 건의...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지방분권과 개헌”

2. 21.
지방분권형
개헌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이 가입한 이른바 ‘지방 4대협의체’가 미국과 같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등 지방 4대협의체의 대표 등이 2월 21일 지방분권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등이 개헌 항목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헌논의의 쟁점이 지방분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우 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수직적 분권의 지방분권 개헌 돼야

지방분권개헌 국회 토론회서 윤석우 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 등 한목소리

2. 21.
지방분권형
개헌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국회와 대통령, 총리 등이 나누는 수평적 분권보다 지방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수직적 분권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는 2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윤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정답은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이라며 "중앙 안에서 수평적 분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답도 아니다. 수직적 분권이 아닌 수평적 분권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밖에 ▲사법권의 분권 ▲보충성의 원칙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방정부로 개정 등도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행자부장관 만나 정책보좌관제 도입 촉구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후원회 제도 등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

2. 21.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윤석우 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이 2월 21일 행정자치부를 찾아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을 만나 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 등 광역의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17개 시·도 의회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인 만큼, 행자부의 향후 정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회장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도위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모두 합쳐 184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운용은 타당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 후원회 운영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건의

정부의 환수 조치는 떨어진 쌀값으로 한숨짓는 농업인 삶 외면하는 처사

2. 29.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가 3월 29일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제출안건 심의·처리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 안건 중에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미리 지급한 쌀값을 다시 돌려받으려 하자 일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산지 쌀값의 90% 수준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쌀값이 폭락해 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돈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도 있다는 게 의장협의회의 전언이다.

의장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환수 조치는 떨어진 쌀값으로 한숨짓는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벼랑으로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지 말라”며 “초과 지급된 우선 지급금 결손 처리를 촉구한다.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정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탄력

최대 숙원인 후원회 제도 첫 문턱 넘어... 국회 법 개정 통해 정치자금 양성화 기대

2. 29.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등

지방의회 정치자금 양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추진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의 최종 결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4월 3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을 중앙선거관위로부터 전달받았다.

앞서 의장협의회는 중앙선거관위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결국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위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다만, 연간 기부·모금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로 하고, 그 후원회는 선거일 후 관할 선거관위에 회계

보고를 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다.

윤 회장은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 등 선진적인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포토 의정

- 01 2월 24일 윤석우 의장, 김홍열 의원은 충남도립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했다.
- 02 2월 24일 윤석우 의장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 03 3월 1일 김중문 의회운영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장, 이진환 의원, 홍성현 의원, 김 연 의원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8주년 삼일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 04 3월 6일 윤석우 의장은 예산군 수덕사를 방문해 방장 설정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 05 3월 8일 윤석우 의장, 조길행 의원은 공주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7 충남도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 06 3월 8일 윤석우 의장,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 보건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 07 3월 9일 이공휘 의원, 김연 의원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린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 08 3월 10일 윤석우 의장, 김 연 의원은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 09 3월 13일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위원장, 조치연 제2부위원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접견했다.
- 10 3월 13일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위원장, 조치연 제2부위원장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탄핵관련 입장발표를 했다.



11



12



14



13

11 3월 27일 윤석우 의장, 장기승 의원, 김홍열 의원, 이종화 의원 등은 충남도청 로비에서 열린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12 3월 31일 윤석우 의장은 공주대에서 열린 제11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13 3월 31일 이종화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돼 '2017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 선정, 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4 4월 5일 윤석우 의장, 김연 의원은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충남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15



16

- 15 4월 6일 윤석우 의장은 도의회 접견실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승구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본회의장 등을 둘러봤다
- 16 4월 7일 조치연 제2부 의장은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충남일보 창간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 17 4월 10일 윤석우 의장이 도의회 접견실에서 수덕사 용산 큰스님과 대전지방보훈청 강윤진 청장 등을 만나 일제강점기 시대 항일독립운동을 펼친 만공선사에 대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8 4월 12일 윤석우 의장은 세종시의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17



18



19

19 4월 12일 윤석우 의장은 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 법회에 참석했다.

20 4월 13일 윤석우 의장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제12, 13대 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21 4월 15일 윤석우 의장과 김용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을 수상했다.



20



21

회기 : 8회 119일(정례회2회 56일, 임시회6회 63일)

※ 예비일수 : 21일 ※ 연간회의 가능 일수 : 140일(정례회 60, 임시회 80)

회기별	기 간	주 요 안 건	비 고
제293회 임시회	2. 6.(월)~2. 16.(목)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7, 공휴일2	• 2017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신정(1. 1.) • 설연휴(1. 27.~1. 30.)
제294회 임시회	3. 27.(월)~4. 6.(목) (11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5, 공휴일2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6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3.1절(3. 1.)

결산검사 (4. 19.~5. 8.) : 20일 예정

제295회 임시회	5. 11.(목)~5. 19.(금) (9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5, 공휴일2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석가탄신일(5. 3.) • 어린이 날(5. 5.) • 대통령 선거(5. 9.) • 결산제출시한(5. 22.) • 전국장애학생체전(5. 16.~19.) • 전국소년체전(5. 27.~30.)
제296회 정례회	6. 1.(목)~6. 16.(금) (16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5, 예결위2, 공휴일5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현충일(6. 6.) • 도민체전(6월말)
제297회 임시회	7. 10.(월)~7. 20.(목) (11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7, 공휴일2	• 2017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 2017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98회 임시회	8. 28.(월)~9. 7.(목) (11일간) ※ 본회의4, 상임(특)위5, 공휴일2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7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광복절(8. 15.) • 전국장애인체전(9. 15.~19.) • 백제문화제(9월말)
제299회 임시회	9. 19.(화)~9. 28.(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특)위6, 공휴일2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금산세계인삼엑스포(9. 22.~10. 23.) • 개천절(10. 3.) • 추석연휴(10. 3.~10. 6.) • 한글날(10. 9.) • 전국체전(10. 26.~31.) • 도민생활체전(10월중)
제300회 정례회	11. 6.(월)~12. 15.(금) (40일간) ※ 본회의4, 행감10, 상임(특)위12, 예결위4, 공휴일10	• 2017 행정사무감사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2018 본예산, 2017 추경 예산안 처리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예산제출시한(11. 11.) • 수능일(11. 16.) • 예산의결시한(12. 16.) • 성탄절(12. 25.)

느낌 여행 충남

2017. 5~6월



[당진] 한진 바지락 축제

기간 2017. 5. 26. ~ 5. 28.
장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
연락처 한진포구 바지락체험축제위원회
 041-356-6060

바지락축제는 한진포구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수산물 축제이다. 당진은 해안선을 따라 잘 발달된 갯벌과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어패류가 풍성한 곳이다. 특히 한진 앞바다는 예로부터 바지락이 풍부하게 나고, 바지락 양식장이 발달되어 있어 바지락을 캐내어 즐겨먹곤 하였던 지역이다. 서해대교가 마주보이는 시원한 한진 앞바다에서 즐기는 행복한 바지락축제에서 바지락 캐기 갯벌체험, 바지락 요리대회, 난타공연, 노래자랑 위대한 탄생, 농·수산물 깜짝 경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겨보자.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기간 2017. 6. 9. ~ 6. 12.
장소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한산모시관
연락처 서천군/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041-950-4432

한산모시문화제는 한산모시 패션쇼, 저산팔음 길쌈놀이, 맛자랑 경연대회, 전통모시, 현대모시 체험 등 행사를 구성해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대를 중심으로 4일간 진행된다. 모시짜기과정체험(태모시, 짚기, 삼기, 날기, 꾸리감기, 베틀), 모시옷입기, 미니베틀체험, 태모시공예품만들기, 모시탁본체험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흥미진진하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특히, 서천군 지명 탄생 600주년을 기념하는 개막식 세리머니 및 한산초등학교부터 메인무대까지(약 900m) 진행되는 개막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1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2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 안내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금지됩니다.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http://blog.naver.com/cncouncil>
-  <http://www.facebook.com/cncouncilNP>
-  <http://mobile.twitter.com/council>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 후 소식받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 이메일 : min1229@korea.kr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